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	
후보자명	박민수	기호		소속정당명	민주통합당
공약번호: 1		공약 제목 : MB 정부 심판			
<p>한미FTA 강행, 4대강 삽질정치, 비리공화국 MB 정부 박민수와 민주통합당이 심판하겠습니다.</p> <p>국민 무시하는 MB 정부, 아직도 믿으십니까?</p> <p>MB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마다 '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'며 눈물로 호소합니다.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. MB 정권과 새누리당은 단 한번도 국민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. '힘들어서 못살겠다'는 서민들의 눈물을 모른채 외면했습니다. 그러나 수천억을 지닌 재벌과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MB 정부가 앞장서서 감싸주었습니다. 박민수는 단 하루가 남더라도 MB 정권을 탄핵하고, 민주통합당으로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.</p> <p>한미 FTA로 농민 다 죽이는 MB 정부, 이대로 두시겠습니까?</p> <p>'미국의 편에 선' MB 정권은 굴욕적으로 FTA를 체결하고, 새누리당은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. 한미 FTA 발효 이후 전북 도내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80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. MB 정권은 한미FTA로 농민들에게 '사형선고'를 해버렸습니다. 농민의 든든한 대변자 박민수는 농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, 19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막아내겠습니다.</p> <p>4대강 삽질정치,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강바닥만 파헤쳤습니까?</p> <p>'아이들 눈칫밥은 먹이지 말자'는 무상급식마저도 반대하던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서는 20조원이 넘는 돈을 아낌없이 풀었습니다. MB 정부는 국민 70% 이상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의 각종 부작용에 눈감아가면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. 국민을 우선하는 박민수는 정권 교체를 통해 지금이라도 깨진 독에 물 붓기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습니다.</p>					
공약번호: 2		공약 제목 : 한미 FTA 재협상, 농업농촌 대책수립			
<p>한미 FTA 재협상을 쟁취하고 무진장임실 지역 농업농촌을 지키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배경 및 제안이유</p> <p>-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 높아짐. 특히 대표적인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농업부분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</p>					

예상됨.

-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축산 농가가 한우 입식을 기피하고 농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음.
- 무진장임실 지역은 대표적인 농산촌 지역임.
- 대규모 주작목은 없으나 축산(한우, 양돈, 양계 등)과 다품목 소량 생산의 순환농업, 금강과 섬진강 상류 지역으로 전라북도의 식수원, 고원지대의 특성을 가지고있는 친환경 생태 지역임.
- 교육특구(산촌유학특구, 농산촌 교육시범지구)등을 추진

□ 대책

- 차기 국회, 정부에서 한미 FTA 문제조항 재협상 강력 추진
- 한미 FTA 폐기를 포함한 범국민적인 재논의
-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
- 지역마케팅 전문가(유통전문가)를 국회보좌관으로 채용  
(4개 군과 농협 등 연합마케팅 추진)
- 금강 섬진강 식수원 지역을 친환경 농업 벨트로 육성  
(한강 식수원 클린 팔당 벤치마킹)
- 다양하고 알찬 소득 작목과 시설 하우스 지원 강화

□ 이행기간

- 한미 FTA 재논의 : 2012년-2013년 중반
- 한우산업 발전방안, 금강 섬진강 친환경벨트 추진 : 2012년-2015년
- 연합마케팅 활성화 : 2013년-2015년

□ 제원조달

- 광특회계 활용
-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활용 방안 마련 등

공약번호: 3	공약 제목 : 소통과 참여정치 실천
예산의 수립, 집행, 평가의 전 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활동가, 전문가들과 일상적인 소통체계를 갖추겠습니다.	
1. 소통과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입니다.	
-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대의 민주주의 체계가 정착된 현대 사회에서 소통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의 척도가 되었습니다.	
- 고 노무현 대통령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소통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치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. 이런 노력의 결과 소통과 참여가	

거스를 수 없는 정치의 대세가 되었습니다.

- 이제 이를 실효성있는 것으로 제도화하고 형식적인 제도화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람과 내용을 채워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.

2. 국가 정책과 예산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의 수립, 집행, 평가의 전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.

- 민주정부 10년 동안 소통과 참여를 위한 형식적인 제도는 많이 도입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왜곡되거나 후퇴한 참여민주주의의 형식적 틀을 보완보충하고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.
- 농정협의체로써 농어업회의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.

3.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활동가와 정책 전문가들과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.

- 지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활동가와 정책전문가들과 일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.
- 지역민과의 정기적인 만남, 각 분야 활동가 전문가와의 정책토론, 4개군 군수님, 의원님들과의 정례협의, 민주통합당 조직과의 소통을 통해 항상 지역민과 호흡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.

공약번호: 4

공약 제목 : 농산촌 교육특구 추진

무진장임실 지역을 농산촌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농산어촌 교육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 시키겠습니다.

☐ 제안이유

- 동부산악권 인구감소와 노령화, 동부산악권 초중고 학생수 감소 심각
- 더 이상의 폐교는 지역피폐화 초래
- 젊은 귀농자가 귀농을 망설이는 이유 중 1위가 교육 문제
- 수도권 산촌유학 희망자 다수 존재
- 전북 교육청 혁신학교, 산촌유학 우수 사례 다수 존재
- 전북교육감, 서울시교육감의 의지 확인
- 진안 아토피, 장수 말산업, 임실 농촌유학센터, 임실 치즈마을 등 지역 특화산업과 교육 연계 가능성

☐ 관련 공약

-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

- 농어촌 대입 배려입학 확대 강화
- 전라북도 교육청 혁신학교 지역벨트화
-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원 유치(진안마이학습장)
-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설립
-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 변경 건의(산촌유학의 제도적 토대)

□ 예산 효과

- 무진장임실 지역이 생태교육건강도시로 브랜드 가치 급상승
-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, 가공, 유통, 체험 관광 활성화
- 마을이 살아나고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촉매제
- 마을기업, 교육, 복지, 가공, 유통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
- 교육문제, 소득과 일자리 문제가 풀려 나가면서 귀농인구 증가

(사람이 돌아오는 무진장임실)

□ 전라북도청, 교육청, 기초지자체, 농림수산식품부, 서울, 경기 교육청 등의 요구를 집약시켜 추진,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농어촌 교육모델 창조 가능
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복지확대, 복지만족도 2배 상승
<p>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농산촌 특성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정착시켜 복지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.</p> <p>1. 노인복지 : 효도하는 민주통합당, 효자 박민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, 대상자 80%로 확대</li> <li>-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</li> <li>- 건강 100세를 위한 " 방문건강관리 패키지 " 시행</li> <li>- 낙상 등 사고요인을 제거하여 노인 안정사고 획기적 경감</li> </ul> <p>2. 장애인 :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나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 연금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.</li> <li>-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.</li> <li>-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.</li> <li>-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.</li> </ul> <p>3. 다문화 :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산된 다문화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</li> </ul>	

-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교육 및 훈련지원
-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
-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'이주여성 후견인제' 도입

I. 기존 복지체계 활성화를 통한 체감도 증진

II. 대안적/보완적 복지 시스템마련

III. 복지활동가 정주여건 개선

IV. 법/제도 제·개정 통한 농산촌 복지정책 정비